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시간이 없다”...기억역사관 건립 필요

피해 생존자 2011년 1만7148명→2021년 2400명 가칭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 건립 지역사회 공감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현실에서 역사관 건립 등 ‘역사 보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그동안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해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명칭을 올해부터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으로 변경하고 가칭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 건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광주시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민역사관 건립은 수년전부터 논의가 됐으며 지난해 초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시민모임은 우선 건립부지부터 마련하기 위해 시민모임 방안을 검토했으며 기부금품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광주시에 등록 신고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로부터 ‘부지 마련’ 명목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은 불가하다는 결정이

내려져 중단했다.

이후 시민모임은 역사관 건립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광주시장을 비롯해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약에 ‘시민역사관 건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현재 시민모임이 보관하고 있는 수천점의 강제동원 관련 자료 정리작업도 본격화 한다.

태평양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 활동을 하다 지난해 12월12일 향년 101세의 일기로 별세한 고(故) 이금주 할머니는 일본의 강제동원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활동했던 법정 소송 자료 등 1000여점을 시민모임에 기증했다.

이 할머니는 1942년 결혼 했지만 남편이 일본에 끌려간 뒤 돌아오지 않고 전사해 생이별을 겪었으며 이후부터 남편의 한을 풀기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수많은 소송을 주도했다.

또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전개했던 자료와 일본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활동 모습도 보관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일제강점기 시절 군사목적으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벙커 등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는 “초등학생의 나이에 일본 전범기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던 피해자들은 현재 평균 90세가 넘어 거동조차 못해 요양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며 “이분들의 삶을 보관하고 기억하는 공간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모임 사무실에 보관돼 있는 자료에 대해 정리 작업을 하고 있지만 방대하고 공간이 비좁고 환경도 열악해 훼손 우려가 있다”며 “역사관을 통해 과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는 지난 2011년 1만7148명에서 2012년 1만6014명, 2013년 1만3854명, 2014년 1만1717명, 2015년 9937명, 2016년 8075명, 2017년 6570명, 2018년 5245명, 2019년 4034명, 2020년



3140명, 2021년 2400명으로 해마다 급격하게 줄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91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북 193명, 충남 183명, 전남 178명, 서울

177명, 경북 160명, 경남 140명, 강원 79명, 인천·충북 각 78명, 부산 76명, 대구 61명, 광주 50명, 대전 39명, 울산 15명, 제주 10명, 세종 7명이다. 박찬기기자

“택시에 두고 내린 2000만원 든 돈가방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금 있었다”



현금 2000만원이 든 가방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손님에게 돈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수상함을 느끼고 수사를 벌여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전달책을 검거했다.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시께 사상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20대 A씨가 택시 뒷자석에 현금 2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두고 내린 것을 택시 기사가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사상서 이준홍 경사는 콜택시 이용 내역을 분석해 A씨에게 연락했고, A씨는 “할머니 수습비”라고 경찰에 말

했다.

이 경사는 “반환절차상 통장내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고, 수화가 너무도 당황한 말투를 듣고 수상함을 감지했다.

이에 경찰은 현금 묶음에 날인된 인출은 행이 소재한 울산 북부경찰서에 보이스피싱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과 A씨가 경남 고성경찰서에 수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 경사는 기지를 발휘해 A씨에게 분실물을 찾으러 경찰서를 방문할 것을 안내했고,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돈을 찾기 위해 사상서를 방문했다가 바로 검거됐다.

현금 2000만원의 원래 주인은 울산에 거주하는 50대로, 저금리 대출 안내에 속아서 A씨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금을 곧 돌려줄 예정이다.

경찰은 또 최초 신고자인 택시기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경사는 “분실자의 입장에서 찾아줘야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고, 당한 시민에게 분실물이 돌아갈 수 있게 돼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여자친구 외도 의심, 닳새간 온갖 악행...전과 19범 30대 남성

징역 7년...폭행·협박 혐의

동거하던 여성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여성을 상대로 닳새간 온갖 악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지난달 1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특수강간·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간, 유사강간, 특수상해, 강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회 전과가 있으며 2005년에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사건 범행에 이르러 법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월29일 1년 넘게 함께 산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흉기와 의자를 이용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까지 저지른 그는 범행 과정에서 “나는 여자피 집행유예만 받으면 그만이다”, “내가 고소해봤자 내가 더 많은 걸로 고소해 낼 수 있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한다.

A씨의 악행은 2월1일에도 이어져 B씨에게 피해자 어머니가 만들어 준 음식물 반찬통을 꺼내 버리게 하거나 손 등을 이용해 바다에 떨어뜨린 반찬을 치우게 했다.

다음날에는 “너는 누구를 사랑했냐”라고 반복해 물으면서 살충제를 가져온 뒤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면서 피해자 얼굴에 살충제를 뿌렸다. 이후 라이터 불까지 켜고 했다.

결국 피해자는 닳새간 A씨에게 시달린 끝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그는 2월3일 직장 동료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B씨와 성관계는 가졌지만 성폭행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살충제를 뿌리거나 전기포트로 물을 뿌린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오히려 피해자가 집에서 탈출해 경찰에 신고할 기회가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았고 A씨에게 청국장을 끓여주고 안부를 묻는 등의 정황에 비취봤을 때 A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걸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과 상반되는 A씨의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들면서 그의 주장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사건 당시 B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등을 증거로 활용한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범행으로 신체적·심리적으로 위축돼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에서도 B씨는 사건 이후 A씨에게 존댓말을 쓰며 병원 출근 후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다고 한다. 사건 전에는 장난스러운 말투로 A씨와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이율리 “법원이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사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여태껏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릴 경우 불이익을 입을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한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 측은 쌍방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이후 A씨와 교제한 여자친구 C씨는 같은 해 2월7일 수사기관이 A씨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 휴대폰들을 숨겨준 혐의를 받는다.

서선욱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